문 대통령 "尹 정부, 우리 성과 부정 하지만 비교 받을 것"

"언론, 때론 편향적…균형적 국정기록 남기는 것이 정부 책무"

문재인 정부 백서 발간 기념 오찬…"잘 한 부문 발전 시키길"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다음 정부는 우리 정부의 성과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다시피 하는 가운데 출범하게 돼 우리 정부의 성과, 실적, 지표와 비교를 받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문재인 정부 백서 발간을 기념해 국정과제위원회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함께 한 오찬에서 "방대한 국정자료와 통계를 포함한 백서를 남겼기 때문에 이 자료들로 이어지는 다른 정부와 비교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우리와 많은 점에서 국정 철학이 다르다고 느끼지만, 철학과 이념을 떠나 오로지 국민과 국익, 실용의 관점에서 우리 정부가 잘한 부분은 발전시키고, 부족했던 점은 거울삼아 더 잘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전날 발표한 국정과제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모두 부정하고 있다는 일각의 분석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비판할 것은 비판하더라도 성과는 성과대로 계승해 좋은 정책의 연속성을 보여 달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남긴 방대한 국정기록은 기록에 그치는 게 아니라 미래 정부에 지침이 되고 참고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은 의미가 있다"고도 했다.

이어 "결국 역사는 기록"이라면서 "지금은 국정이 항상 공개되고 언론이 취재해 모든 것이 기록될 것 같지만, 때로는 언론은 편향적이기도 해서 전체 국정기록을 남기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은 '시간이 지나면 (정부의 성과를) 역사가 알아줄 것'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았다"라며 "'지금은 평가받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위로가 내포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실제 그 말대로 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성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높이 평가되고 있는데, 그것은 당시 국정자료와 통계자료를 남겼기 때문"이라며 "그 지표들을 다음 정부와 비교할 때마다 노무현 정부가 경제, 안보에서도 유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정과제위원회의 성과를 두고 "공무원 사회는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근간이지만, 크게 개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정과제위원회의 비전과 공무원 사회의 유능함이 만나 개혁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한편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는 임기 마지막까지 경제 및 안보위기에 대응할 것"이라며 "청와대에서 매일 열리는 일일상황회의 및 대통령 주재 참모진 회의는 임기 마지막 날인 9일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의 '코로나19 대처상황'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위기관리센터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대처상황'이라는 보고서를 만들고 있다. 오늘 969번째 보고서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백서 발간 기념 국정과제위원회 초청 오찬에 앞서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백서를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이정식 고용노동 장관 후보자 자질·도덕성 날 선 공방

새 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종섭 국방 "공관 그대로 사용"

조승환 "일류 해양 국가로 도약"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 시 대통령 관저로 활용될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 인근의 국방부 장관 공관을 그대로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4일 "해양수산 분야의 위기를 극복해 세계 일류 해양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임명되는 (현재) 국방부 장관 공관으로 들어가실 것이냐'고 묻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국방부 장관 집무실로 드나드는 사람도 관저를 드나드는 사람과 똑같이 대통령 경호처에서 검문검색을 하고, 신원 확인을 할텐데 불편함을 무릅쓰고 들어갈 것이냐'라고 지적하자 "경호처 입장은 기존의 경호 개념을 완전히 바꾸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확인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 용산구 동빙고동에 있는 군인아파트에 대통령실 인원이 일부 입주하는 방안이 협의 중인 사실도 확인됐다.

이 후보자는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동빙고동 군관사 일부를 청와대에 뺏기고, 군 장교들이 이전한다는 얘기가 있다'고 묻자 "아직 최종 결정된 건 아니고 협의 중인 걸로 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어촌지역은 고령화를 넘어 소멸 위기에 처해 있고, 해운항만산업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미래를 예단하기 어려우며, 해양 영유권을 둘러싼 해양 국가들의 경쟁도 치열해지는 등 대내외적 환경이 녹록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경험과 역량을 발휘해 '도약하는 해양경제, 활력 넘치는 바다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공언했다.

조 후보자는 먼저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면서 "어촌의 주거·소득·생활 수준을 개선할 뿐 아니라 과학적인 자원 관리 정책으로 지속가능한 어업 구조를 확립하고, 양식·가공·유통 시설을 스마트화해 '청년들이 돌아오는 젊은 어촌'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이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시절 비위 의혹 등을 언급하며 날을 세웠고, 국민의힘은 후보자를 엄호하면서 열린 자세로 노동 정책을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이 후보자가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시절 노동부가 이 후보자를 해임할 것을 재단 이사회에 요청했던 점을 언급하며 "사무총장은 일반 임직원보다 훨씬 책임이 큰 직책"이라며 "당연히 해임돼야 할 것 같은데 부결됐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헌법 책무 저버려…국민에 대한 배신행위"

국힘, 검찰개혁 입법 문 대통령·민주 맹공

국민의힘은 4일 검찰개혁법안(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했다.

국민의힘은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이른바 '꼼수 탈당' 등으로 법안 처리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면서 권한쟁의심판 등 전방위 대응책을 꺼내든 상태다. 그러면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심판의 시간이 오고 있다"며 국민심판론을 부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 입법 강행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경고한다. 국민을 속였다고 좋아하지 말라. 법에서 도피했다고 안심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결국에는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앞으로 다가오는 총선에서 (민주당을) 심판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도 KBS 라디오에 나와 "죄를 지은 분들은 (검수완박 입법으로) 지난 5년간의 모든 범죄 의혹들이 이제 포근히 덮인 만큼 발 뻗고 주무실 것이고,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이 받게 된다"면서 "이 엄청난 일을 저지른 민주당을 지방선거에서 국민이 반드시 표로 심판해 주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을 향한 원색적 비난도 쏟아졌다.

정권교체를 목전에 둔 임기 말 국무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 공포를 강행했다면서 "꼼수완박 독주"라고 쏘아 붙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민생이란 이름으로 국민 기만하지 말고 헌정 파괴의 입법 독재부터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영석 최고위원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문 대통령이 자신과 자기 편을 방어하기 위해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것이며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거들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마지막까지 나라야 찢어지건 말건 특정 진영의 수장이었던 것"이라며 "정권 마지막에 자기에 대한 비리 수사를 막는 법을 공포한 것은 법치국가에 없다. 마지막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해냈다"고 비꼬았다.

법안에 대한 '원천 무효' 주장도 나왔다. 정 최고위원은 "바지사장을 내세워서 탈세하는 것은 불법으로 처벌한다. 민영배 의원의 위장탈당, 꼼수탈당은 불법이다.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검수완박 법안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조 최고위원도 "법안은 통과됐지만, 상황은 끝나지 않았다"면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론을 촉구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